이재명 10대 공약 '회복·성장·행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제 강국·K민주주의 회복·경기활력 증진
검찰 등 사법개혁·세종 행정수도·4.5일제 등
"성장 이뤄야 저출생·고령화·기술변화 등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포괄임금제 금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정치 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존중 사회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 순위 1호에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

내란 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부문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과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대법관 정원 확대' 등 검찰·사법 개혁 등 내용을 포함했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 마련',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등을 내걸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RE100 산업단지 조성',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등이 함께 제시됐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AI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대선 때는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인권과 행복추구권 관련으로 광범위하게 10대 및 전체 공약으로 확산해 들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수당, 어촌 직불금 확대 등 형태로 깔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향후 개헌과 관련한 구상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4년 중임제가 빠졌는데 개헌안은 따로 준비돼 있나'라는 물음에 "개헌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성환 정책본부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 몇 가지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 제시했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많다"며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 이후 집권하면 구체적 내용들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시스

"타이밍이 정책 성과 좌우한다"

김관영 도지사, "민생예산 신속 집행 등 도정 역량 집중을"

김관영 도지사는 "타이밍이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민생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국가예산 확보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합동간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도의회의 협조로 조속히 확정된 만큼, 이제는 신속한 집행만이 남았다"며 "속도감 있는 집행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국장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5월 부처단계는 국가예산 확보의 첫 관문인 만큼, 중점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끈질긴 집념과 시군,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라"며 "국가예산 확보 = 전북의 발전권, 도민의 행복권 확보라는 공식으로,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민선8기 핵심과제는 전북의 산업별 비전과 도정 철학을 실현하는 핵심 축인 만큼,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책임행정을 발휘해 달라"며, 이어 "이제는 도민 앞에 성과로 응답할 시점으로,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홍보를 통해 도민 체감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출연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체"라며,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과 보고를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결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읍·고창 '용광로 선대위' 공식 출범

윤준병 의원 "압도적 승리로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압승을 목표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12일 출범한 이 선대위는 지역 내 정치·사회 각계 인사를 아우르는 통합형 조직으로, 윤준병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번 선거를 "갈등과 분열을 넘는 국민통합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정읍·고창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승 선대위를 구성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을 앞두고 "정읍·고창 주민들께서 85% 이상 투표율, 95% 이상 득표율로 응답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강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대위는 정읍과 고창 지역의 전직 시장·군수부터 현직 시·도의원, 각종 직능단체 인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까지 고루 참여한 폭넓은 연합체로 꾸려졌다.

정읍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강광·김생기·유진섭 전 시장과 장기철 전 위원장이, 고창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우정·이강수 전 군수와 김원봉 상임고문이 이름을 올렸다.

본부장 인선 역시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고르게 포진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정읍 상임총괄본부장은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정태호 전 샘골농협 조합장이 맡았고, 고창 상임총괄본부장에 조민규 고창군의장과 김만기·김성수 도의원이 임명됐다. 정읍 공동본부장에는 김철수·고영규·장학수·김대중 전 도의원과 정도진·조상중·고경윤 전 정읍시의장, 박일 정읍시의장이 임명됐고 고창 공동총괄본부장으로는 문규환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경 고창조경건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읍·고창 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3주간 '대형 집중유세'보다는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골목유세'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 운영해온 현장 민원소통 프로그램 '토방청담'의 취지를 살려, 유권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국 도보행진으로 '검찰 권력 해체' 촉구하고 나선 조국혁신당

"국민 주권 회복 위한 실천"

전주지검 앞에서 규탄 목소리
참가자들, 국민적 연대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1일 전주시내 일원을 도보 행진한 후 전주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행사를 가졌다.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의 전국 도보행진이 지난 11일 전주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이날 전주시내 일원을 도보 행진한 후 전주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행사를 가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출발해 전주시내 12.14km를 걸은 뒤, 오후 2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사는 '검찰해체선봉대 조국'이 주도하는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 해체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도상 위원장을 비롯해 이규원 전략위원장, 황현선 사무총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참여해 발언했다.

이들은 "전주지검은 정치기소의 상징"이라며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이번 행진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이라며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지청(5월 15일), 정읍지청(16일), 남원지청(17일), 광주(18일), 봉하마을(23일) 등 전국 20여 개 검찰청을 방문할 예정인 이 행진은 오는 6월 2일까지 계속된다.

참가자들은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한 시민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연대를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도심항공교통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김대중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대중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 도민이 첨단 교통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각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대선 투·개표소 화재안전대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개표 종료일인 6월 3일까지 한 달간 추진된다.

우선 도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16개소, 사전투표소 242개소, 투표소 566개소, 개표소 15개소 등 총 83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소방관서장 및 부서장이 관할 투·개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컨설팅을 병행한다. 아울러 소방서별로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합동점검 사항을 협의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후인 6월 2일부터 3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항,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김제시장 주장에 "유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된 하나의 무역항 체계로 운영된다"며 "정성주 김제시장의 주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을 하나로 묶은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원포트' 체계 도입을 의미하며,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통합 운영된다는 것이 정부 공식 방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별도 항만처럼 해석했고, 군산시가 신항을 자신들의 부속항으로 주장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정 시장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며 "항만 운영은 국가가 맡는 사안으로, 기초지자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산시는 일관되게 통합 운영을 주장해왔고, 해수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허위 주장과 억지 논리는 지역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아우르는 새만금항은 협력과 통합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며 "정치적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